

1.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3

- 1)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행위 준칙이다.
- 2) 우리나라 특유의 접대문화, 연고주의, 공사구분 모호 등 관행적 요인이 부패의 고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무 수행 시 준수해야할 구체적 행동 기준을 제시하였다.
- 3)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.
- 4)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.

2. 제·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2

- 1) 평가기간은 통상 30일이다.
- 2) 각 기관은 법령을 개정 또는 제정하고자 할 때 관계기관 협의가 끝난 후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한다.
- 3) 행정기관은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의견 반영 여부를 법제처 심사의뢰 시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- 4) 법령 등의 조속한 시행 등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평가가 가능하다.

3. 『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』상 보상금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3

- 1) 공익신고에 대한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는 장려금
- 2) 부패행위 신고로 받게 되는 유·무형의 손해에 대한 정책적 배려
- 3) 부당이익의 환급
- 4) 공익증진에 기여한 대가

4. 부패인식지수(CPI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3

- 1) 부패인식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(TI)에서 발표한다.
- 2) 부패인식지수가 높을수록 부패 없는 국가이다.
- 3) 경제규모에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높은 편이다.
- 4) 부패인식지수는 매년 발표한다.

5. 부패영향평가 기간은? 3

- 1) 10일
- 2) 20일
- 3) 30일
- 4) 40일

6.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4
- 1)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.
 - 2) 부패통제의 용이성 및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.
 - 3) 수평적·자율적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부패통제가 가능하다.
 - 4) 우리나라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.

7.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 제재 강화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2
- 1) 신고방법은 서면 신고가 원칙이나 구술신고로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술신고도 가능하다.
 - 2)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.
 - 3) 부패행위자가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감봉 처분시 직근상급감독자는 그보다 1단계 낮은 견책 처분을 받을 수 있다.
 - 4) 신고기관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, 감사원, 수사기관, 소속기관의 장이다.

8. 부패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1
- 1) 부패행위 신고는 공직자만이 할 수 있다.
 - 2)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안 경우에는 법이 정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.
 - 3) 신고자간의 인적사항,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신고한다.
 - 4) 국민권익위원회 및 조사기관에 부패를 신고함으로써 부패행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긴다.

9.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기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1
- 1) 공직자의 직근 상급자
 - 2)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
 - 3) 국민권익위원회
 - 4)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

10. 공공기관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이유와 관련이 적은 것은? 1
- 1) 행정정보공개제도 도입
 - 2) 공직자의 과도한 재량권
 - 3) 공공기관이 가진 우월적 지위
 - 4) 시장 독점적 위치

11. 다음 중 『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부패방지 제도개선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? 4
- 1) 공기업 협력업체 선정비리
 - 2) 교육공무원 비리
 - 3) 지자체의 민간 포상관련 예산낭비
 - 4) 사립대학의 기성회계 운영 부조리

12. 보상금 지급의 감액사유가 아닌 것은? 4

- 1)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여부
- 2) 신고한 부패해위가 신문·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이냐의 여부
- 3)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
- 4)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된 신고를 한 경우

13. 각 기관 특성에 맞추어 스스로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은? 2

- 1) 요청에 의한 평가
- 2) 자율평가
- 3) 시범기관 운영
- 4) 컨설팅

14.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4

- 1) 내부공익신고는 공익적 행위이어야 한다.
- 2) 내부공익신고는 개인의 양심적 판단, 전문직업인의 윤리 등에 토대를 둔 윤리적인 행위이다.
- 3) 내부공익신고는 조직 내부의 비리를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외부적 행위이다.
- 4)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호범위의 축소가 필요하다.

15. 다음 중 부패방지 시책 평가의 평가체계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은? 2

- 1) 부패방지성과
- 2) 고유시책평가
- 3) 공통시책평가
- 4) 자율시책평가

16. 외부청렴도 측정의 평가영역이 아닌 것은? 3

- 1) 부패지수
- 2) 투명성지수
- 3) 업무청렴지수
- 4) 책임성지수

17. 부패영향평가 기준 중 재량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3

- 1) 재량권자, 재량범위,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규정에 분명하고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.
- 2) 주어진 재량의 범위가 사회작 통념이나 국내외 판례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를 평가한다.
- 3) 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, 기업,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는지를 확인한다.
- 4) 재량과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또는 재량행사의 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.

18. 다음 중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의 목적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? 3

- 1) 공직사회의 부패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
- 2) 기존 부패진단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
- 3) 주로 정책분야의 부패수준을 측정하여 반부패 정책수립에 활용
- 4) 공동분야의 공정성·투명성 향상으로 국가청렴도 제고

19. 부패행위 신고의 기능과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1

- 1)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도 보호의 대상이 된다.
- 2)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,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취득한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
- 3) 저비용, 고효율로 부패통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경제성이 있다.
- 4) 부패예방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.

20. 부패청산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4

- 1) 청렴한 나라들은 대부분 국민소득이 높다.
- 2)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아 국제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.
- 3) 반부패문제는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되었다.
- 4) 부패문제와 국제사회 신뢰도는 관련이 없다.

21.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취해지는 조치가 아닌 것은? 1

- 1) 신고자 명단 공표
- 2) 신고자를 위한 인사교류 조치
- 3) 불이익 처분을 향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
- 4)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

22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상 보상금 지급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2

- 1) 부패행위의 신고가 있어야 한다.
- 2) 익명의 문서로도 가능하다.
- 3) 수입의 증대 등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.
- 4) 신고로 인하여 몰수·추징금의 부과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.

23.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4

- 1) 대상자는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공직자이다.
- 2)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공공기관과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와 법인·단체이다.
- 3)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관련성과 관련 없이 취업을 제한한다.
- 4) 영리사기업체의 경우에는 업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취업을 제한한다.

24. 부패방지 제도개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? 1

- 1) 부패유발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사후적인 부패방지 수단이다.
- 2) 현행법상 민간기업, 민간단체 등은 제도개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.
- 3) 각급 기관에서 실시하는 제도개선으로 자율적 제도개선과 의무적 제도개선이 있다.
- 4) 제도개선의 사후관리는 자율적 제도개선과 의무적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실시한다.

25. '특혜의 배제'에 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? 2

- 1) '특혜'란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차별하여 법령 등 명확한 근거 없이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공정한 거래 또는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.
- 2) 기관장이 기관 내 종교인과의 오찬모임에 참석한 경우에는 특혜의 제공을 금지한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.
- 3)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·혈연·학연·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4) 학교장이 과학실험보조원을 채용하는데 있어 공개채용절차를 무시하고 비공개 특별채용형태로 자신의 자녀를 채용한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다.

26. 윤리경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3

- 1)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그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요구하게 되었다.
- 2) 기업의 윤리경영 기준이 국제협약 등으로 규범화·표준화되고 있다.
- 3) 윤리경영과 기업의 이익은 서로 상충된다.
- 4) 각종 정보통신, 미디어매체의 발달로 인해 기업의 윤리경영의 실태가 손쉽게 해외로 전파된다.

27. 반부패·청렴정책 추진 기본방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3

- 1) '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'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.
- 2) 국제사회 반부패라운드에 적극 동참하여 국가 청렴도 향상에 노력한다.
- 3) 반부패 정책은 공공분야에 한정될 뿐 민간영역과는 관련이 없다.
- 4) 공직사회 부정과 비리의 빌미가 되는 관행을 과감히 개선한다.

28.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기술로 올바른 것은? 4

- 1)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의 부패행위 신고는 내부공익신고만을 의미한다.
- 2)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부패행위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.
- 3)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도 보호의 대상이 된다.
- 4)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.

29. 다음 중 부패영향평가 요청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것은? 4

- 1) 국가의 안보 및 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
- 2) 행정기관의 설치·조직·기능 및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
- 3) 정부정책결정에 따라 동시에 ‘일괄’ 개정되는 사항
- 4) **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**

30.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2

- 1) 『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』에 규정된 ‘부패행위’의 저어 이는 공직자의 직무관련 사익추구행위, 공적재산의 침해행위,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이다.
- 2) **2010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우리사회 전반의 부패수준에 대하여 일반국민이 청소년들에 비해 부정적 인식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.**
- 3) 국가청렴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국가이미지가 형성되어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경제 환경이 개선되며 이는 결국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.
- 4) G20 반부패 행동계획은 구체적·실질적 내용과 향후 이행관리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G20 국가가 부패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.

31. 신고자 등 신분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3

- 1)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또는 경제적·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- 2) 불이익을 당한 경우 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- 3) **신고자 신분보장 등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.**
- 4)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『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』이 정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.

32. 행동강령책임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 3

- 1) 원칙적으로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.
- 2)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『공직자 행동강령』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- 3) **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과 관련하여 상당한 내용은 상당자의 직속상관에게 통보해야 한다.**
- 4)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.

33. “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”에 대한 처리 절차로 옳지 않은 것은? 3

- 1)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.
- 2)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계속될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.
- 3) **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였다도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**
- 4)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취소·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.

34. 반부패·청렴시책의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평가로서 공공부문 청렴도 제고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선진 반부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는? 4

- 1) 청렴 마일리지 제도
- 2) 맞춤형 청렴 컨설팅
- 3) 부패관련 인식도 조사
- 4) 부패방지 시책평가

35. 공통시책과제에서 추진체계 구축, 민관협력 활성화, 반부패청렴 우수사례 도입·확산 노력 등을 평가내용으로 하는 평가과제는 ? 4

- 1) 기관장 노력도
- 2) 제도개선 종합대책
- 3) 부패영향평가 운영
- 4) 반부패 인프라 구축·운영

36. 신고자 등 비밀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1

- 1) 신고자가 간접적으로 특정된 경우에는 신분공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.
- 2) 권익위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 경우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3) 신분공개가 확인된 경우 책임자에게 징계나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4) 신고사항을 이첩 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.

37. 부패영향평가의 의의·목적 및 법적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2

- 1) 법제도상 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·평가하여 반부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2) 부패영향평가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.
- 3) 공공기관은 법령 등의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출하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.
- 4)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·검토하여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38. 「공직자 행동강령」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 3

- 1)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그대로 따른 경우, 그 일을 지시한 상급자뿐만 아니라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같이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.
- 2) 특혜란 법령의 근거 없이 타 집단과 차별되는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 또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.
- 3) 공직자가 업무유관기관 직원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단란주점으로 간 후, 단란주점 유흥비를 포함하여 업무협의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라 볼 수 없다.
- 4) 도시계획담당 직원이 그린벨트 해제정보를 이용하여 싼값에 토지를 매입한 후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경우는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행동강령에 위반된다.

39.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종합하여 산출한 것으로 국민의 입장과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평가한 청렴도를 종합한 지표는 ? 2

- 1) 공공청렴도
- 2) 종합청렴도
- 3) 신뢰청렴도
- 4) 자체청렴도

40. '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'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2

- 1)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- 2) 직무관련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기념품 등을 받을 수 없다.
- 3)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은 받을 수 있다.
- 4)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를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은 받을 수 있다.

41. 「공직자 행동강령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 4

- 1) 공직자가 그린벨트 해제정보를 이용하여 싼 값에 토지를 매입한 후 매각하여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경우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규정에 위배된다.
- 2) 공직자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3) 공직자는 기관 내부의 전산망을 통해 소속 직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할 수 있다.
- 4) 공직자는 관용 차령 등 공용물을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42. 「공직자 행동강령」의 필요성에 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? 3

- 1) 공직자의 가치관이나 의사결정, 행동은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침
- 2) 공직자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높은 수준의 사고와 도덕성을 필요로 함
- 3) 적발, 처벌 위주의 사후적 통제기준 마련
- 4) 공직자의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

43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의 부패행위가 아닌 것은? 2

- 1) 공직자의 직무관련 사익추구 행위
- 2) 사기업 등 민간부문 부패·비리행위
- 3) 공공재산의 침해행위
- 4)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·권고·제의·유인하는 행위

44.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4

- 1)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그 기여분 등에 대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이다.
- 2) 신고의 정확성, 언론에 기 공개여부 불법행위 여부, 부패행위 사건해결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.
- 3) 공익신고 활성화와 부패예방 및 척결에 기여한다.
- 4)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재정수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.

45. 법령입안단계에서 각종 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·평가 후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제도는? 2

- 1) 규제영향평가
- 2) 부패영향평가
- 3) 환경영향평가
- 4) 재해영향평가

46. 신변보호 대상이 아닌 것은? 4

- 1) 부패행위 신고자
- 2)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
- 3) 신고의 협조자
- 4)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미리 알고 있었던 신고자

47. 기관예산으로 구입하여 관산에 비치한 가전제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이 자신의 집으로 옮겨서 사용하는 것은 「공무원 행동강령」에 위반되지 않는다. X

0(맞다) X(틀리다)

48.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한 부패행위만 보호받을 수 있다. X

0(맞다) X(틀리다)

49.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도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. X

0(맞다) X(틀리다)

50. 권익위에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모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. X

0(맞다) X(틀리다)